

2030년 직매립 못하는데…쓰레기 소각장 또 표류 우려

광주, 2016년 상무소각장 폐쇄로 전국 유일 소각장 없는 광역지자체
생활쓰레기 전량 매립…예고된 ‘쓰레기 대란’ 막으려면 꼭 조성해야

광주시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추진해온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사업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위장전입이 드러나면서 사업은 좌초 위기에 몰려 또 다시 표류될 위기에 처했지만, 예고된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각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 서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16년 상무소각장 폐쇄로 현재 전국 유일하게 광역자치단체 중 소각장이 없는 상태다.

시는 현재 생활쓰레기 처리는 전량 매립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광주시 쓰레기 매립장은 64만㎡ 규모로, 매립 용량 948만㎥ 가운데 2023년 말 기준 46%가 채워졌다. 아직 여유는 있지만, 2030년 이후에는 소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폐기물은 매립할 수 없게 된다.

시설이 없으면 매일 500t이 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하다.

2020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할 수 없다는 점에 서다. 이 때문에 새 소각장 건립은 광주시의 필수 과제가 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022년 소각장 설치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혐오시설이라는 주민들의 거부감 때문에 입지 공모는 번번이 실패했다. 주민 반발과 요건 미달로 1·2차 공모가 무산되자, 3차 공모부터는 ‘자치구 선정 후 시 주도’ 방식으로 절차를 바꿨다. 그 결과 서구 서창, 광산구 동산·삼가·지평동 등 6개 후보지가 선정됐다.

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삼가동을 최적으로 선정했다. 삼가동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개발제한구역보다 인허가 절차를 1~2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또 부지 면적은 8만3700㎡로 넉넉하고, 인근에는 빛그린산단과 자동차산단이 있어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산업단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부지 경계에는 왕복 4차선 도로가 접해 접근성과 물류도 유리했다.

광주시는 주민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주민숙원사업 300억원, 자치구 교부금 200억원, 편의·문화시설 건립비 600억원이 포함됐다. 또한 총 3240억 원을 투입해 소각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체육·문화·레저 시설을 조성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소각열로 지역 난방을 공급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방안도 고려됐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농산물 판로 붓고 우려,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이유로 결사 반대했다.

주민설명회는 두 차례 무산됐고, 대상지 인근 한평군 주민까지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

광주시가 우여곡절 끝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업 신뢰성은 무너졌다. 결국 경찰 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되자 “선정 절차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광주시민의 공동현안이기도 하다. 2030년까지 소각장을 완공하지 못하면 광주시는 쓰레기를 타 지자체 소각장에 위탁해야 한다. 연간 100억~3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다. 이는 시민 부담으로 직결된다. 시는 내년 중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를 마쳐야 2027년 설계와 착공이 가능하다고 계산했으나, 현재 상황에선 일정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광



“대장 진급 신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처 수여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 자원회수시설은 단순한 갈등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도시의 미래와 직결된 정책 과제이자 전국 유일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필수 기간 시설이라는 점에서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혐오시설이 아닌 공공 인프라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사후 모니터링을 민관 합동으로 운영하는 등 안전 확보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늘린다 정부, 1조1천500억 원 예산 편성

정부가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자 올해보다 1500억원 늘어난 1조15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해 정비사업비를 1조488억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재난 피해주민의 일상회복을 위한 피해복구비로도 6500억원 늘어난 1조100억원을 배정했다.

재해 정비사업비와 피해복구비 연간 예산(본예산 기준)이 각 1조원을 넘기는것은 내년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사업계획을 담아 76조4426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중 사업비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43.8%인 2조303억원 늘어난 6조6천665억원이다.

예산안 중 가장 많은 부분인 지방교부세는 69조3459억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4302억원이다.

행안부는 세계 최고 인공지능(AI) 민주정부 구현, 국민 안전 확보, 자치발전·균형성장 촉진, 사회통합 및 과거사 해결 등 새정부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예산규모를 보면 AI민주정부 및 정보

화에 8649억원, 국민안전에 2조5197억원, 자치발전·균형성장에 2조5921억원, 사회통합 등에 6898억원이 배정됐다.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국비지원에 1조15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15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1조원을 편성했다.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해 공공부문 AI서비스 지원에 206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AI를 행정업무에 적용하는데 187억원을 증액 배정했다.

국민이 복잡한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도 일상 언어로 요청하면 자동 처리해주는 ‘AI 에이전트(agent)’ 서비스 도입에 8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를 위해 올해 264억원에서 41억원 늘어난 305억원을 투입한다.

/연합뉴스

박선원 “‘이 대통령 피습’ 테러 지정 말자는 국정원 보고서 확인”

지난해 1월 부산에서 흥기 피습
국정원 법률특보 보고서 존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김성태 추가조작 시도 첩보문건도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1월 부산에서 흥기 습격을 당한 것과 관련, 당시 김상민 국정원 법률특보가 ‘테러’로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한 보고서가 있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2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의 특별감사 중간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테러로 지정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며 테러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김 전 특보의 보고서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전 특보는 작년 4·10 총선 때 경남 창원 의창국민의힘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뒤 국정원 특보로 채용됐다. 김건희 여사가 김 전 특보를 창원의창에 출마시키고자 힘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돼 첩검이 수사 중이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경찰에 습격범 조사 내용 공유를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부산 경찰 측에서 접근 자체를 거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당시 ‘피해는 별로 없는데 이 대통령이 오버(over)하고 있다’는 프레임 전환과 관련해 적어도 국정원은 무관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특별감사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자료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이 국정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국정원은 북한 업무 부서에서 생성한 자료만 한

정해서 제출했다”면서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 중 쌍방울 측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대북 사업을 벌이모 추가조작을 시도 중이라는 첩보 문건이 새로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선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자체 조사를 대면 보고했고, 윤 전 대통령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들)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 정부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피살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실제로 박 전 원장이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대거 나왔다”며 “당시 삭제했다고 알려진 특수 정보, 첩보, 보고서 원본과 사본은 그대로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Sky is unlimited

취업성공!
탁월한 선택!

항공 특성화 대학

CHODANG UNIVERSITY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항공운항학과

항공관광서비스학과

UCC자유전공학부

항공학부

• 항공정비전공

• 무인항공기전공

• 항공기제작전공

• 도심항공모빌리티전공

스포츠과학부

• 스포츠경기지도전공

• 생활체육전공

웰니스라이프학부

• 헤어미용전공

• 메이크업전공

• 피부&화장품전공

• 사회복지전공

• 청소년교육상담전공

• 재활헬스케어전공

• 약물관리전공

• 펫케어전공

호텔조리관광학부

• 글로벌서양조리전공

• 제과제빵&패전공

• 아시아루주전공

• 해양식문화관광전공

국방·소방 안전학부

• 군사학전공

• 국방행정드론융합전공

• 소방안전관리전공

• 첨단방재시스템전공

• 지적학전공

• 경찰·해양경찰전공

미래평생교육학부

• 창업경영전공

• 뷰티라이프전공

• 웰니스사회복지전공

• 상담심리전공

• 글로벌푸드전공

• 디지털패션전공

• 평생교육전공

국제학부

• 한국어학전공

• 국제문화관광전공

• 글로벌화학기계전공

• 스포츠헬스전공

• 글로벌경영전공

• 예술디자인전공